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정) 2008.8.21.(공고 제2008-799호)  
(개정) 2009.2.28.(공고 제2009-118호)  
(개정) 2009.7.13.(공고 제2009-732호)  
(개정) 2011.3.17.(공고 제2011-292호)  
(개정) 2012.4.10.(공고 제2012-349호)  
(개정) 2013.3.7. (공고 제2013-336호)  
(개정) 2016.3.2. (공고 제2016-5205호)

(개정) 2017.6.21. (고시 제2017-5164호)  
(개정) 2018.2.2. (고시 제2018-5026호)  
(개정) 2019.4.1. (고시 제2019-5045호)  
(개정) 2020.2.23. (고시 제2020-5054호)  
(개정) 2020.11.26. (고시 제2020-5231호)  
(전부개정) 2024.5.22. (고시 제2024-1206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협력사업”이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선정 전까지의 기관(기업 포함)은 “신청기관”이라고 한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의 기업을 말한다.
9.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0.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1. “연구개발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3.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4. “연구개발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합계를 말한다.
  - 가. “지원연구개발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도 시장·군수장 포함)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5. “사용잔액”이라 함은 이 요령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6. “이월금”이라 함은 이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7.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이 요령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8.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액의 합 중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9. “불인정액”이라 함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20. “환수금”이라 함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지원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21. “정책지정과제”란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22. “계속과제”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3. “문제과제”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4. “실시”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5. “기술료”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제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경기도(도 시장·군수 포함),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9.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30. “경기도과제관리시스템(이하 ‘과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1. “연구비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2. “비영리기관”이란 제2호, 제3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인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3.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4. “사업기간”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5.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공동협력사업 중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지원

## 제2장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제

**제4조(전문위원회)** 도지사는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신규과제 추진방향
2. 기타 연구개발(R&D) 사업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연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문하는 사항

**제5조(연구개발 평가후보단)** ① 도지사는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구개발 평가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후보단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후보단을 운영하고, 도지사와 상호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평가위원의 위촉 및 평가이력 등 관리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④ 평가후보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 모집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10년) 이상 경력자

다. 상장기업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사람

2. 학계

가. 2년제 전문대학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의 교수

나.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경영전문가

6.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기술투자전문가

7.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후보단에서 해촉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제6조제5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

7. 기타 평가후보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후보단으로 위촉된 위원을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위원에게 2년 마다 논문, 특허, 업무경력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평가위원 자격을 갱신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하지 않는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도출
2.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연구개발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제5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 심의·평가받는 연구개발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들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⑥ 전문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등으로 온·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을 통보하고, 재심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할 경우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 도지사는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0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①항 각호에 해당되는 과제의 조치를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고, 문제과제 및 기술료 또는 회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환수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 도지사는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 및 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
  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조정, 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과제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계획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확보 및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진도점검 실적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기술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보존·관리

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대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해야 한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실시기업의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10조(공동연구개발기관)** ①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기관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진도점검 실적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보존·관리

15. 기타 도지사,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원칙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 실적보고서, 단계 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동협력사업의 연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10.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11.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사후조치 및 경과 보고

③ 연구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단,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 이상 중 기간이 짧은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

- 한다)하려는 경우 :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4분의 1 이상 중 기간이 짧은 경우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하나의 과제에 연구책임자가 다수인 경우 총괄연구책임자를 둘 수 있다.
- ⑤ 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지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국외출장, 감염병,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 ⑥ 공동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업계획의 수립·공고 및 선정 등

**제12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 도지사는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 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지역기술청사진 및 지역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기술개발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도지사는 매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및 방법은 세부시행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제출방법은 전산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9. 사업의 전문기관(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1. 그 밖에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내외 기술 및 수출 등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신청)** 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 계상률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관은 전문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제5조의 평가후보단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도지사가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과제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가. 기초연구단계
    - 나.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 ④ 도지사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도 기술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기관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구개발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종합평가의견 포함)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전산으로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협약, 정산 등의 관련서류는 각 절차가 종료된 시점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전산으로 보관한다.

## 제4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17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비는 해당 단계의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원금의 지원기준)** ① 도지사(도 시장·군수장 포함)는 협약 시에 해당단계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도 시장·군수장 포함)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하며,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도의 정책, 예산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다.

**제19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비율은 지원금의 10퍼센트 이상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3.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 기자재 등
  4. 그 밖에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기관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신규채용 참여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 까지 채용한 참여연구자도 인정)
  2. 제1호에 따라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 경우, 현금 인건비계상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1]의 산업기술 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 기준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 제5장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관리·사용

**제20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직접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협약을 체결한다.

1. 연구개발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최대 10년 이내)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④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1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⑦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도(도 시장·군수 포함)의 예산, 단계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문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도지사가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연구개발 방법, 정량목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3. 제1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변경
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6.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증액 또는 감액 등으로 인한 연구개발비의 변경
7.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개발기관별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총액, 지원금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의 변경
8.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 단계로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 이월
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 계상률의 변경(제14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3.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
4.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이 요령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다음단계 연구개발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자가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의 협약변경은 사업종료 60일 전까지 가능하며, 협약변경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제23조(협약의 해약)** ①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개발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제28조부터 제30조에 의한 단계·특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거나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0조에 따라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8.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1.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2.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4.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도지사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지원금의 지급)** ① 도지사(도 시장·군수장 포함)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재정사정, 사업추진 상황,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입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도 시장·군수장 포함)는 재정사정 등으로 부득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분할(2회 이상)하여 지급할 수 있고, 단계별 협약의 경우 단계 평가를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도 시장·군수장 포함)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입금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입금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승인하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협약 후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정을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
3.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인지한 경우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환수, 사업 중단, 제재부가금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

⑨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⑩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의 동일 항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월금은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추가하여 이월금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단계보고서 제출 시 편성내역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이월금이 편성된 경우 동일 항목의 본예산보다 이월금이 우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⑪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 제6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제26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①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단계평가
2. 최종평가
3. 특별평가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0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이 열람 및 제시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자·장비일자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같음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이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단을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평가를 생략할 필요가 있을 경우 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진도점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으로 정한 진도점검 시점 또는 도지사,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 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를 함께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 “조기종료”로 판정한다.

③ 중단으로 판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3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최종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로 제출)를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해당 기술 발주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보완”으로 판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특별평가)** ①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3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부정행위, 기타 제23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9조 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종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다.

**제31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 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우수”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추가 부담한다.

③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완”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한 후 다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추가 부담한다.

**제3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해당일)부터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일로부터 45일이 되는 날까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각 단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실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전문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정산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개발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자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개최하여 회수금을 확정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불인정금액 포함)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⑪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금(불인정금액 포함)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재산)조사,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할 수 있다.
- ⑫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회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 제7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 해당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해당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 중 공동연구개발기관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중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개발한 지식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행정기관(경기도, 도 시장·군수),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성과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35조(사업 성과분석)** 도지사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목적,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 및 기술·경제 분야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사업 체제를 개편한다.

**제36조(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기관이 개발 진행 중인 내용 또는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도(도 시장·군수 포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목록 및 초록집,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과 활용보고서상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관련 연구개발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 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제37조(기술실시계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술료 납부확약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 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업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도내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다음 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 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사실 확인, 규정해석 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⑥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초·원천연구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9조(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 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3년간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별 특성 및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개발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반 및 시스템구축 등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①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 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단공표, 참여제한, 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징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요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7. 이 요령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8.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9.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11.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협박하여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12.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15.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성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 않거나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6.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서(단계, 최종, 성과활용, 수행보고서 등 의무로 정한 사항)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②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도지사는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재처분의 내용을 과제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 ⑤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⑥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도지사(도 시장·군수장 포함)에게 보고하고 이를 도(도 시장·군수장 포함)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 ⑧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⑨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⑩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유용·횡령 등 연구개발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또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재산)조사,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라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⑫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⑬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⑭ 참여제한 및 지원금의 환수 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제41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① 도지사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후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제재대상자 및 기관과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4. 제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제재대상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기도 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제재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2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미납하면 신용(재산)조사,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한다는 내용

## 제8장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제43조(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③ 도지사는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

는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윤리의 확보)** 지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경기도(도내 기초자치단체 포함)·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 40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단 회의록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경기도(도내 기초자치단체 포함)·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참여연구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 40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장 보 칙

**제46조(연구개발기관 및 평가후보단 교육)** ① 도지사는 협약체결이후 제3조 각 호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및 평가후보단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문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 도지사는 예산 또는 제3조의 연구개발 사업별 예산항목에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사업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운영비 편성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운영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사업운영비를 편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확인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업운영비 사용실적 정산결과를 확인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운영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운영비의 정산잔액 및 발생 이자를 도(도 시장·군수 포함) 금고에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개월 이내에 정산액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재산)조사,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수당 등)** ① 이 요령에 따른 평가단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49조(포상 등)** ①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우대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후속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가산점 부여
2. 우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에서 정한 기한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세부규정 등의 제·개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관리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출연(출자)기관 중

복수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제15조의4(위탁의 취소 등) 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적용특례)** 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기획연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2024.5.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요령은 고시일 이후 협약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한 각 사업은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